

대학기숙사와 지역주민의 상생모색

Considering win-win Strategy for Local Resident & University Dormitory Construction



강 대 진 / 세종대 대외협력처 주임

Kang, Dai-Jin / Dormitory Manager,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Sejong University
djkang@sejong.ac.kr

1. 들어가며

많은 대학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정원 축소와 재정건전성의 악화를 극복하고, 교육부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평가를 대비하며, 대학생의 주거여건 개선과 대학경쟁력 향상이라는 일석다조의 기숙사 신축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학부모도 원하고, 학생도 원하고, 대학도 원하고, 교육부도 원했던 기숙사 사업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복병을 만나게 된다. 원룸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이 생존권을 이유로 기숙사 신축을 반대하게 되는데 대학과 주민, 대학생과 주민간의 지루한 싸움과 소송으로 사회적 비용과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최근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극복하고 대학기숙사를 준공하며 상생의 방법을 찾았던 세종대학교의 사례를 토대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고 갈등해결 방법에서 대학이 취했던 태도와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고자 한다.

2. 대학기숙사 확충과 설치기준

고등교육법과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지원시설의 하나인 기숙사를 교사시설로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기숙사 시설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기숙사에 대한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의 대학구조조정과 반값등록금, 반값기숙사의 이슈와 맞물려 기관인증평가를 받지 못하는 대학은 부실대학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그동안 기숙사 보유율이 기준치 이하인 학교들은 기숙사 확보가 시급한 현안의 문제

로 대두되었다.

2011년부터 대학의 기숙사의 확보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고등교육기관 인증평가 중 기숙사 수용률 10% 이상이라는 기준이 제시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인증제도, 지방우수 학생 유치, 서구 선진대학의 RC(Residence College)형 기숙사 도입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표 1. 기숙사 수용률의 시대적 변화

시대별	1996년 이전	2012년 이전	2012년 이후
주요내용	15% 이상	기숙사 확보는 대학자율	10% 이상
기준근거	대학설치 기준령	대학설립 운영규정	대학기관인증 평가기준
주요개념	자율적 유명부실	자율성, 미강요	평가강제 (미인증불이익)

특히 2012년부터 교육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행복(공공)기숙사 사업을 정부정책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대학부지 내에 사학진흥기금(37%)과 국민주택기금(53%), 학교자부담(10%)을 재원으로 대학생에게 공공 기숙사를 설립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총 32개 사업에 공공기금 3,726억원(15,276명)을 지원하여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의 주거생활 개선과 대학경쟁력 확보차원 공공기숙사 신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3. 기숙사의 신축과 주민갈등

과거에는 주로 교육시설로 인한 주변의 민원이 소음과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와 조망 및 일조건 등의 환경권이 많았다. 대학에서는 각종 민원에 대해 대화와 타협, 중재를 통해 갈등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려대의 사례는 진심으로 설득하고 노력한 결과 갈등을 해소하고 오히려 장학재단 설립과 기부금이라는 성과까지 만들었다.

표 2. 고려대 기숙사와 불교계의 갈등

개요	고려대 기숙사가 개운사와 보타사 등 사찰과 인접해 있어 수행환경이 훼손될 수 있어 불교계가 항의 시위
기간	1년 (2008. 8-2009. 8)
가치충돌	기숙사 부족 VS 사찰의 수행환경 보호
갈등상황	대학 총장실 방문, 천막농성, 천막법당
갈등해소	설계변경, 보호수 식재, 공동 장학회 설립 등
해결주체	개운사 주지, 중앙승가대 총장, 고려대 총장
평가	장학재단설립 등 갈등승화로 학생편의 증가 (장학금 지급, 수용인원증가 700명→950명) 대화와 타협, 중재(장학회 설립)로 대학 기숙사 갈등해소의 상생모델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원룸임대사업자와 하숙집운영자 등을 포함한 지역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인들이 생존권을 명분으로 집단시위를 하며, 선거로 뽑힌 자치단체장을 압박(구청에서 시위 또는 구청장 면담요청 등) 하고 있다.

그 영향으로 대학 기숙사의 사업승인이 지연되면서 약 7천명의 학생들이 기숙사 입주는커녕 건축공사조차 진행이 안 되거나 지연되면서 대학생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무색해 졌다.

학생들도 기숙사 공사 및 입주지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서명운동을 하고, 구청장 면담을 요구하고, 주민등록거소를 대학으로 이전하며 투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심판하겠다고 단행행동에 돌입하고 있다.

표 3. 주민반대 겪는 대학기숙사 신축

사업명	수용규모	진행상황
이화여대	2,344	주민들 감사청구
연세대	1,150	학교앞 반대시위
고려대	1,100	성북구청 심의보류 중
서울대	1,000	서울시 보류 중
경희대	926	행정심판 청구 후 건축허가 받음
홍익대	200	행정소송 승소 후 건축허가 받음
합계	6,720	

대학가 주민들이 기숙사 신축에 반대하는 이유는 임대료 하락과 공실률 증가 등 경제적 손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학의 기숙사가 완공되면 현재 50만~60만원 선인 원룸 임대료가 10만원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숙사 신축사업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와 준공승인 등의 보류를 하고 있다.

마포구청은 홍익대와의 민사소송에서 불명확한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보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게 된다. 경희대도 행정소송을 통해 동대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게 된다.

주민들의 표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지역상권의 문제를 쉽게 넘어 갈수 없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대학의 손을 쉽게 들어 줄 수도 없는 실정이다.

대학과 학생들에게 ‘행정권한을 남용했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도 유권자인 지역주민에게 원성을 듣느니 차라리 투표권이 없는 대학에게 원성을 듣는 게 낫다는 판단일지도 모른다. 선거를 통해 심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골치 아픈 문제임에 틀림없다.

대학으로부터 법적 소송을 통해 결론이 나면 주민들에게도 법적인 판단이 내려졌으니 건축허가를 더 이상 안 해 줄 수 없다며 관할구청에서는 주민민원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4. 세종대 기숙사 신축의 추진경과

세종대는 2011년에 들어서 대규모 기숙사의 신축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2011년에 기숙사 수용률은 1.4%로 기숙사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

표 4. 세종대 기숙사 수용률

연도	수용인원(명) (A)	재학생수 (B)	기숙사 수용률 (A/B*100)
2011	176	12,187	1.4
2012	334	12,328	2.7

더구나 세종대는 교사확보율도 부족하여 2014. 기준 교사확보율이 96.4%로 100%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기숙사와 연구강의동이라는 복합시설로 건축목표를 설정했다.

표 5. 세종대 기숙사 건축개요

■ 건물규모	지하 5층, 지상 13층			
■ 건축기간	2013.4.19. ~ 2015.2.12			
■ 건축면적	1,600m ²			
■ 연 면 적	29,670m ² (8,975.175py)			
■ 수용인원	유 형	1인실	2인실	합계
	사실수	4	356	360
	수용인원	4	712	716
■ 기숙사비 (월 기준)	유 형	1인실	2인실	4인실
	금액(천원)	119	238	-
■ 부대시설	식당, 세미나실 등			

세종대는 2012년에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공공기숙사 사업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그리고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는데 타 대학과는 갈등해결과 신축사업의 양상이 조금 달랐다. 세종대는 2015. 2월 준공허가를 받아 학생들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비슷한 시기의 타 대학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해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에야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완성사진 조감도
그림 1. 세종대 기숙사의 조감도와 완성사진

2012. 12월 광진구청은 세종대 기숙사 및 연구강의동 건축허가를 위해 공청회와 공람공고에 대한 주민의견을 보내왔다. 아울러, 건축허가는 주민의견에 대한 대안 및 대책 방안을 주민들에게 설명 후 처리예정으로 그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 하였다.

표 6. 세종대 기숙사 신축에 대한 주민의견

순번	반대이유	요구사항
1	일조·조망권, 주변원룸소유자의 재산피해	기숙사 건축규모 축소
2	혐오시설	쓰레기분리수거장설치 반대
3	안전문제 우려	인접건물 안전문제 발생
4	주변 주차난 가중	주변차량 세종대주차요청

세종대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해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조치계획을 광진구청에 제출했다.

먼저 기숙사 건축규모 축소는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고, 대학기관인증 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므로 불가함을 강력하게 설명했다.

둘째, 기숙사 시설 내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 반대는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였으나 주민민원을 고려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시켰다.

셋째, 안전대책은 최상의 안정성이 확보된 공사기법과 최신의 기계를 사용하여 공사로 인근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넷째, 기숙사 건축으로 삭제되는 거주자 우선주차 차량은 대학 기숙사의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대는 워낙에 기숙사 시설이 부족하므로 반드시 기숙사 시설을 신축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설

득하였고, 주민들은 혐오시설인 쓰레기분리수거장 반대가 워낙 거세어 대학에서는 쓰레기분리수거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설치 하는 데 중점을 두어 설계를 변경하여 신속히 기숙사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기숙사 신축을 추진할 수 있었다.

홍익대와 경희대 등 타 대학은 같은 시기 기숙사를 반대하는 원룸사업자들의 압력행사로 건축허가가 보류되면서 구청과 갈등을 낳게 되었다.

세종대는 기숙사 반대 지역여론이 확산되지 않고 주민들이 플래카드 한두 개 붙는 선에서 마무리 되었으며, 기숙사의 신축을 위한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표 7. 세종대 기숙사 신축의 추진 경과

일정별	주요내용
'12. 06.	공공기숙사 건립사업 배정통지
'12. 09.	세종대 공공기숙사 SPC 설립
'12. 10.	광진구청에 건축허가 접수
'12. 11.	15일간 공람공고
'12. 12.	주민의견 수렴 및 처리방안 통보
'12. 12.	건축허가
'13. 04.	기숙사 착공
'15. 02.	기숙사 준공허가

5. 세종대 강의연구동 신축과 주민갈등

세종대는 기숙사 외에도 강의연구동을 신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으며 대규모 주민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은 기숙사의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2014년 10월경부터이다.



명칭 : 세종대 강의연구동
용도 : 교육연구시설
층수 : 지하5층, 지상12층
건축연면적 : 51,981m²
구조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최고높이 : 55.4m
기숙사 : 3개층 90실

그림 2. 세종대 연구동 신축 조감도

2014. 9.29 강의연구동 신축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설명회가 군자동 주민센터에서 있었다. 세종대는 강의연구동의 3개 층에 외국인 기숙사 (90실, 180명)와 1층에 상업시설을 설계에 반영했다.

이 때 주민들은 세종대가 기존 기숙사의 신축에 이어서 강의연구동에도 기숙사를 신축하며 상업시설을 유치한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묵었던 감정이 폭발하기 시작했다.

안 그래도 주민들은 세종대의 기숙사 신축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으면서, 기숙사의 완공모습이 눈에 보이자 원룸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임대가격 인하라는 생존권의 위협을 분명히 느끼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기숙사를 짓고 있는데 또 무슨 기숙사냐며 신축 반대 여론이 만들어 졌다. 이 여론은 그동안 기숙사를 신축하면서 소음과 진동 그리고 많은 불편함을 겪었던 공사장 인근 주민들로부터 시작되었고, TV를 통해 타 대학의 기숙사 반대여론이 많다는 사실을 접하며, 구의원과 시의원 등 정치인과 통반장 등 지역여론 주도층이 개입하면서 확대된 것이다.

표 8. 주민반대 여론

주민 의견	1. 원룸을 운영하는 주민에게 경제적 피해가 있으니 기숙사 시설은 운영하지 말 것
	2. 지상1, 2층에 계획되는 부대시설은 주변 상권에 경제적 피해가 있으니 설치하지 말 것

견집을 수 없도록 여론이 나빠지고 드디어 주민들은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구의원과 자치위원들이 나서서 세종대 기숙사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플래카드를 거리 곳곳에 붙이며 서명운동으로 약 4천명의 주민들 서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통장협의회 등의 관변단체, 산악회 등의 친목단체, 주민들의 임의단체를 가리지 않고 반대여론을 형성해 나갔으며 세종대 주변 거리 일대에 15개 이상의 플래카드를 부착하며 세종대와 광진구청을 압박하고 있었다.



연구동 신축반대 1 연구동 신축반대 2

그림 3. 세종대 기숙사 반대 플래카드

주민들은 광진구청에 항의방문하고 구청장에게 연구동 건축허가 뿐 아니라 기숙사 신축의 준공을 앞두고 있는 세종대에 승인을 해주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 했다.

세종대 기숙사는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마무리 중이었기 때문에 주민민원 때문에 공사를 중지할 상황이 아니었고 기숙사의 준공을 위해 빨리 주민민원을 해결하라는 구청의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다.

세종대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공공기숙사를 신축하여 2015년 1학기부터 기숙사를 사용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요 입학정원의 감소 등을 동반한 대학기관인증 평가 등 각종 평가시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표 9. 기숙사 갈등 쟁점정리

구분	주요주장	주요활동
주민대책위	기숙사 신축이 주민생계위협	신축반대 활동
	세종대가 주민과 상생모델 요구	반대플래카드, 서명운동, 구청 항의방문
광진구청	주민반대 민원해소 요청(빠른 해결원함)	주민과 대학간 중재역할
세종대	연구동 사업승인 기숙사 준공승인	기숙사 위기관리 주민과 협의추진
		주민홍보와 설명

6. 주민갈등 해결을 위한 대학과 구청의 노력

대학은 갑작스런 주민들의 연구강의동 신축의 반대여론으로 공사 중인 기숙사 준공도 늦어질지도 모른다면 노심초사 하였다. 광진구 주민들은 TV와 신문을 통해 대학기숙사를 반대하는 여론이 경희대, 홍익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할 것 없이 원룸임대사업자들을 중심으로 국가적 갈등 이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구청에서는 주민 눈치를 살피며 건축허가를 보류한다는 것이다.

구청에서는 광진구 주민센터를 중심한 주민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자 세종대에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통 큰 양보를 주문하기도 했다.

그동안 대학의 경영자들은 주변 상권과 지역주민의 삶에 대학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다. 대학은 대학발전만 생각했지 그 영향이 미치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대해 큰 고려가 없었다.

이 일을 통해 대학의 경영자들에게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만들어 주었다.

대학은 연구강의동 이슈로 인해 신축기숙사로 준공 지연이라는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행정부총장을 책임자로, 관리처장을 주축으로 주민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성난 민원을 달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

그동안 대학이 진행해 왔던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과 앞으로의 방향을 정리하여 광진구청과 주민들에게 세종대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표 10. 세종대의 정책 구상

구분	주요내용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의 정책 지속 및 강화	1.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실시 (한식, 양식, 인문학 강의 실시) 2.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3. 지역주민에게 운동장 개방 4. 대학의 음악회에 무료초청
향후 지역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의 실시	1. 임대차 공유프로젝트 '세종패밀리하우스' 제안 시행 2. 대학도서관 무료개방 3. 대학 내 주차시설 이용협조 4. 대학무료법률 상담센터 운영 5. 주민행사시 대학시설 편의제공

대학은 지역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권위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외면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광진구청과 대학이 함께 대학생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했다.

6.1 세종패밀리 하우스 - 임대차 공유경제

세종대가 제안한 세종패밀리 하우스는 구청의 한지붕 세대공감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한 임대차정보 공유경제 프로젝트였다. 지역주민의 주택 및 건물 임대차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종대는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의 정보를 연결하여 알선하는 사업이다.

전문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그동안 임대해 주었던 노후주택이 기숙사 신축으로 공실우려가 되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방안으로 원룸임대사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주장한 것을 귀담아 듣고 정책으로 수립한 것이다.

표 11. 세종패밀리 하우스

사업명	세종패밀리하우스
사업내용	세종대가 지역주택과 임대건물 등을 세종대의 가족하우스로 지정하여 건물의 공실(공급)정보와 주거공간이 필요한 대학생(수요) 정보를 연결하는 공유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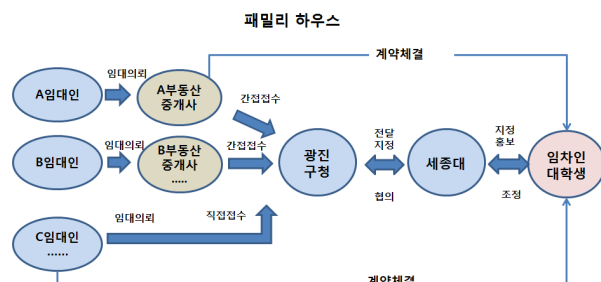


그림 4. 세종패밀리 하우스 구조도

실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주로 반지하나 화장실이 밖에 있는 노후주택이 많아서 학생들이 꺼려하는 것이 현

실이었고, 대형임대건물의 경우에는 공실이 많지 않아서 대학이 원하는 정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대학이 구청과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만으로도 주민민원에 대한 충분한 성의를 표현한 것이었다.

6.2 민관학의 상생 모델 세광군협의체 구성

오랫동안의 논의과정을 거쳐 세종대, 광진구청, 군자동 주민들은 2015년 3월 20일 공식적인 3자의 협의체인 세·광·군위원회를 만들었다.

대학은 주민들과의 대립과 갈등, 소송보다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협의체를 통해 대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주민들도 지난날의 과오는 모두 잊고 대학과의 우호적 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하며, 지역주민들과 의논하며, 상호소통 할 수 있는 모임이 되길 바라며, 구청이 중재하여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사진 1. 세광군 협약식



삼계탕 행사 주택가 미니소방서 설치 한글날 체험행사

사진 2.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

어르신 사랑의 삼계탕 드리기 행사, 지역주민과 대학의 기숙사 인근에 미니소방서 설치, 광진구 주민센터와 함께 하는 한글체험과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주민과의 스킨십을 높이며 지역발전을 위한 공감대로 대학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였다.

세광군 위원회는 군자동 주민센터 내에 두며 위원장은 세종대학교 행정부총장이 맡게 됐다.

7. 결론을 대신하며

대학의 위기극복과 경쟁력 확보, 그리고 대학생들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가 대학의 기숙사 신축이다. 그러나 대학 기숙사가 신축되면서 원룸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거세어 대학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부는 어려움을 겪어 왔다.

대학과 주민과의 갈등과 마찰이 소송으로 가지 않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상생의 모델을 만들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세종대의 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이 알아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라는 방관식 입장이 아니라 대학과 머리를 맞대며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하다. 그 속에서 주민과 대학 간의 거리가 좁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의 절실함이 필요하다. 대학이 소극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기숙사 문제 등 건물의 신축은 끊임없이 표류할 것이다. 대학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화합하고 갈등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최대한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셋째, 주민들과의 신뢰를 형성해야 한다. 주민민원 중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순위로 처리 하는 게 필요하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전부 해결할 수는 없다. 신뢰는 작은 만남과 대화부터 시작한다. 지역 주민과의 스낵집과 이벤트는 그래서 중요하다. 단계별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하는 추진전략 중요하다. 대학이 성장해야 지역사회도 발전한다는 공감대와 소통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전부 원룸사업자는 아니다. 원룸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기숙사를 반대했지만 지역여론은 대학이 지역사회에 무관심하고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과 지역 주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통해 우호적 여론이 형성되어 있다면 갈등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대학은 기숙사 신축시 지역주민과의 갈등 문제를 원룸사업자들과의 경제적 측면만이 아닌 사회의 주도적 역할로 대학이 주민과 함께 발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 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목적만을 위해 기숙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선진국처럼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형성하

고 지역사회가 발전하는 모델을 추진해야 한다. 대학의 반경 2km 이내의 모든 환경은 에듀시티(교육도시)으로 정의를 하고, 대학의 총장은 에듀시티와 유니버시티를 아우르는 경영자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종대의 모델도 진행형이지 완전한 종결형은 아니다. 여전히 대학과 구청,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학과 주민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상생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갈등 폭을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불교포커스, 고대기숙사 신축에 수행환경 위기, 2008. 10. 21
2. 불교포커스, 개운사 고려대 갈등 장학회 설립으로 승화, 2009. 8. 5.
3.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한 대학 기숙사 운영관리과정, 2015. 5. 14.
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슈페이퍼(기숙사의 정보공시와 주요이슈들, 강대진, 2014. 10
5. 국정감사 정책자료, 2012, 국회입법조사처
6. 세종투데이, 2015, 세종대학교 온라인 소식지